

대한항공

안갯속 희비 엇갈린 양대 국적항공사

아시아나항공

# 기안기금 1조 추가 지원 경영분쟁 재발은 부담

VS

# M&A 불발, 매각좌초 위기 정부 지원 배제 '진퇴양난'

대한항공, 기안기금 수혜 눈앞  
유동성 위기 해소 등 '숨통'

아시아나, 인수 무산 가능성 고조  
통매각 대신 분리매각 검토 시사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를 만나며 M&A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양대 국적 항공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채권단으로부터 앞서 지원받기로 한 1조 2000억원에 이어,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회가 최근 회의를 통해 기금 운용 규정과 채권 발행 사안 등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기금 채권 발행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한항공은 1조원 안팎의 자금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지원받았던 1조2000억원도 기금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의 결정을 떠나서, 전체적

으로 채권 발행 등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큰 틀에서 논의를 했다. 대한항공 지원 결정은 오는 11일에 심의회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돼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대한항공에 정부의 지원이 잇따르면서, 3자연합 발 '경영권 분쟁'도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3자연합은 앞서 지난 3월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근호 씨움에서 완패했던 바 있다.

그런데 이후 약 두 달여만인 지난달

26일 '기타법인'으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주식 약 2.49%를 추가 매입하며, 다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재정비에 들어간 것이다. 3자 연합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로 이뤄져 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여파 속에 M&A가 진행되며, 정부의 지원 배제뿐 아니라 인수합병 여부조차 불투명해진 진퇴양난에 놓였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HDC현대산업개발-미래

에셋대우 컨소시엄과 각각 주식매매계약(SPA) 및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M&A 진행 중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업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매각 일정이 지속 연기되며 인수 불발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 유지'라는 정부 지원의 요건을 지키기 어렵고, 인수합병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기금 지원 논의에서도 일단 배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산업은행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인수 무산 가능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현대산업개발 측에 오는 27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인수의지가 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각이 무산될 경우, 채권단이 기존에 고수하던 '통매각' 대신 계열사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상 최악의 업황 속에서 분리 매각을 해서라도,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채권단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는 M&A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채권단의 요구에 현대산업개발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인수 조건의 재협상을 제시한 상태다. 인수 계약 체결 이후,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인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이 명백히 발생되고 있다는 말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계약 기준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돼 재무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고, 코로나19 등에 따른 상황 관련 지원책 및 계약 체결 당시의 본원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 의지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채권단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양측은 모두 일단 최종 거래 종결일을 연장하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관련 거래 조건을 두고, 재협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아시아나 부채 4.5조 증가 등 예상치 못한 상황”

>> 1면 “아시아나 인수 재협상”서 계속

HDC현대산업개발은 “미래에셋대우와 항공업 진출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참여해 지난해 12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과 각각 주식매매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 절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쟁당국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국내는 물론 유수의 현지 로펌

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현재 러시아를 제외한 중국 등 모든 국가에서 승인을 받았다. 러시아로부터의 승인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어 “인수를 위해 출범한 미래혁신준비단도 총원, 변경 및 보강해 현재 23명 규모로 인수 준비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각 부문별로 외부 전문가들을 선임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비용과 인원을 투입해, 인수 후 통합(PMI)에 필요한 여러 컨설팅 프로

젝트도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인수 계약 체결일 이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이 명백히 발생되고 확인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무려 4조5000억원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공시된 지난해 감사 보고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외부감사인이 아시아나항공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함에 따

라, 이번 계약상 기준인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확정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계약 기준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돼,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며 “향후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영업 실적 하락 등을 극복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과, 계약 체결 당시의 본원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서울 강남구 HDC 본사 모습. /연합뉴스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 전장·AI·5G 등 대규모 M&A 가능성

>> 1면 '구속 면한 JY'서 계속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며 성장 의지를 피력했다.

이미 이 부회장은 지난달 중국 시안 반도체 사업장으로 출장을 떠나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투자 방침을 밝혔고, 며칠 뒤 평택사업장에 새로 투자해 극외선(EUV) 공정을 도입한 파운드리 라인을 세우겠다고 실형에 옮기기도 했다.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증설 여

부도 관심거리다. 경쟁사인 대만 TSMC가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한 상황, 삼성도 여러 파운드리 고객사가 있는 미국 공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미중무역분쟁이 격화하는 중에 이 부회장이 어떤 전략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또다른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2018년 출소 후 4대 성장사업을 지목하고 18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전례가 있어서다.

특히 삼성이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

규모 M&A를 단행할 가능성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몇 년간 100조원이 넘는 현금보유액을 이용해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업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코로나19로 M&A 적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전장과 인공지능(AI), 5G 등 분야에서 '빅딜' 기대가 쏠린다.

단, 이 부회장이 아직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경영 행보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인데다가,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관련해서도 수사를 지속할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삼성은 2년 가까운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별다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들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해 기소만을 피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 결정이 권고에 지나지 않는 탓에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김재용 기자 juk@